

아이 낳으면 키워준다더니... 까다로운 양육 지원 조건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서 5세와 6세 손녀를 6년째 돌보고 있는 장영숙(65)씨는 "광주시 양육정책이 '그림의 떡'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장씨는 올해 초 손자녀 돌보미 사업 안내 현수막을 보고 담당 기관에 연락을 했지만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손녀들을 돌보기 위해 딸의 집 근처로 이사까지 했다는 장씨는 "손주들을 돌보고 딸에게 용돈을 받고 있다"면서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지원사업이 반가웠지만, 쌍둥이만 지원된다니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다"고 푸념했다.

전국 첫 시행한 광주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에도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등 조건 충족 어려워 지원 받기 힘들어 긴급돌봄서비스 휴일 사용 못하고 꿈드림미 바우처 사용처 한정

장씨를 비롯한 광주지역 부모들 사이에서는 광주 지역 공공기관의 양육정책 지원조건이 현실성이 없거나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산만 하면 지자체가 키워줄 것처럼 정책을 쏟아 내놓고 있는 있으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4월까지 지원 받는 광주 지역 할아버지, 할머니는 606명이다.

이 사업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20~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광주시가 시행한 것이다.

지난 2021년에는 2008명이 지원을 받았고 2022년 1971명 지난해에는 2450명이 지원을 받았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같은 세대가 중복으로 계속해서 지원 받을 뿐 돌봄공백이 발생한 대다수의 가정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만 '만 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세자녀 이상인 세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광주시는 "국비가 아닌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재원의 한계 탓에 지원 대상을 늘리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신청자 65%정도가 이미 지원 받은 세대라는 점을 감안해 더 다양한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비스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야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 아이돌봄' 역시 긴급한 상황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긴급 돌봄은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모가 광산구와 서구에 위치한 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당 2000원의 보육료를 지불하고 아이를 맡기는 서비스다. 이를 활용을 위해서는 광주긴급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아이 등록 과정을 거친 후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들은 실제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지역 맘카페에는 "갑자기 상을 당해서 타지역으로 가야하는데 아이등록에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데다 주말 예약은 미리 하지 않으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광주 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4명으로 하루에 5~10명 정도의 아이를



창포물로 머리 감는 '해맑은 동심' 전통 명절 단오를 엿새 앞둔 4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열린 전통문화 체험에 참가한 일곡 키움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있다. 옛 선조들은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으면 창포 특유의 향기가 나쁜 귀신을 쫓고 머리에 윤기가 난다고 믿어 단오에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왔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돌보고 있는 탓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아예 이용할 수 없는 데다 토요일엔 신청이 몰려 예약이 힘들다는 것이 부모들의 하소연이다. 한 달 후 주말 예약을 한 부모가 있을 정도다. 게시글에는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긴급"이라는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지난 4월부터 광주시 교육청이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중학교·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

로 100만원 상당의 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림미 바우처'의 경우에는 사용처가 한정적인데다 이체와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바우처는 주로 안경점, 서점, 독서실 등에서 사용 가능한데 본사가 서울 등 타지역에 있는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내년 2월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사라지고, 가맹점 아닌 곳에서 결제하면 연결된 계좌에서 금액이 빠져나간다. 고등석사비, 기숙사비, 교복비 등 학교에 납입해

야하는 경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체가 불가능해 학교에서 매긴다 결제해야해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학부모는 "가게에 갔다가 가맹점이 아니라 가게에 돌아오게 몇 번인지 모르겠다"면서 "경비가 주로 많이 나가는 학원비까지 사용처를 늘려주고 5월부터 지급시기를 시작하는 것보다 교재 구입이 많은 신학기 초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떡떡한 비스킷 2박스 먹게 하고 "물 마시지 마!" 취침시간 4시간 잠 못자게 하고 음란행위 강요 못된 고참들의 말로

군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군인상대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제대 장병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인천 모 해병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임병에게 떡떡한 비스킷류 과자 2박스, 초콜릿 1봉지, 초코바 1봉지 등을 먹게 한 뒤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고, 자신이 씹고 빨은 배

후임병 가혹행위·성추행 등 제대 장병들 잇따라 징역형

를 후임에게 먹도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임병을 취침 시간에 4시간 동안이나 잠을 못하게 했고, 바지를 내리거나 샤워장에서 음란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폐쇄적인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A씨가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예측 할 수 없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대군인 B(2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강원 국군강릉병원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B씨는 후임병 6명을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추행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뿐만 아니라 군생활에 대한 회의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토지 확보율 부풀린 광주 금동지주택사업자 벌금형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지 토지 확보율이 20.64%에 불과한데도 80%이상을 확보했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조합추진위원회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주택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금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대표 A 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조합추진위 업무대행계약사 대표와 공모해 지난 2022년 7~8월께 광주시 금동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과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도 기소됐다.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토지 확보율이 각각 80%, 95%를 넘어서야 조합 설립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불과 20% 수준의 토지 확보율에도 곧 공사가 시작되고 입주 가능할 것처럼 광고한 뒤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80% 이상 토지확보 비율이라고 작성된 토지조사 목록을 조합 가입 희망자들에게 보여 주기도 했다.

관리 감독 지자체인 광주시 동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주택 모집 관련 홍보물의 즉시 철거·정정, 관련 문구 삭제 등을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거듭된 시정요구에도 조합 가입 희망자들에게 토지확보 비율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